광주TP 원장 첫 인사청문 파행… 사상 첫 "지명 철회"

18일 광주시의회 예결특위 회의실에서 김범모 신임 광주테크노파크(광주TP)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시의회 제공

금융거래 자료, 가족 재직증명서 등 "개인정보" 제출 거부 또 거부

"의회 무시, 공적마인드 부족"… 개원 이래 첫 지명 철회 요구 결정

광주테크노파크(광주TP) 원장 후보자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에 청문위원들이 집단 반발하며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는 파행 끝에 결국 부적격 결정과 함께 지명 철회 요구로 막을 내렸다.

광주시의회가 인사청문 후보자에 대해 만장일치로 부적격 판정을 내린 적은 몇 차례 있었으나, 지명 철회 카드를 꺼내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TP 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범모(59) 후보자를 대상으로 모두발언과 직무수행계획을 들은 뒤 질의답변을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후보자가 핵심자료 제출에 거부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면서 청문회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온종일 공전했다.

"공직후보자의 자세가 아니고 의회무시다" "내로남불 아니냐"는 지적에도 후보자는 "개인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개를) 동의하지 않는다"고 버텼다.

후보자가 제출을 거부한 자료는 후보자와 배우자를 포함한 최근 5년 간 금융거래 현황과 배우자·직계 존·비속 재직증명서와 사업자 등록증 내역, 직업 변동 현황 등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전 특위의 두 차례 자료 요청을 거부한 데 이어 이날 청문회장에서도 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위원들의 요구에 작심한 듯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필순 위원장은 "8, 9대 의회 모든 후보자들이 관례적으로 제출한 필수자료이고, 도덕성 검증 등에 꼭 필요한 자료"라며 "오해 받지 않도록 제출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으나, 후보자는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강수훈 위원은 내로남불을 질타했다. 강 위원은 "후보자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특보로 역임하던 2022년 4월, 한덕수 총리 인사 청문회가 자료 제출 거부로 파행됐는데, 당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검증을 받기 싫다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말했었다"며 "다른 사람 검증할 때는 잣대를 들이 대고 본인이 검증 받을 때는 그 잣대를 거두냐"고 지적했다.

박미정, 박수기, 김용임, 서임석 위원 등도 "무책임하다" "실망스럽고 놀랍다" "공적 마인드가 부족하다" "지원동기가 없는 직무수행계획서는 처음 본다"고 추궁했으나, 후보자는 "생각의 차이고, 입장이 다르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결국 특위는 청문 절차가 무의미하다고 판단, 청문 없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여기에 더해 광주시장에게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 "정치적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광주시의회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의결한 것은 2015년 2월, 제7대 의회 때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시의회는 지난 7대 의회에서 공공기관장 13명 중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과 복지재단 대표, 광주전남연구원장 등 3명의 후보자에 대해 만장일치 부적격 결정을 내렸고, 이들 모두는 이후 사퇴했다. 또 7개 의회 도시공사 사장, 8대 의회 환경공단 이사장과 복지연구원 원장 등 3명은 자진사퇴했다.

9대 의회 들어선 청문대상 기관이 기존 8개에 더해 광주TP 등이 추가되면서 12곳으로 늘었으나 부적격이나 자진사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뉴시스

김명수 광산구의장, 특수학급 설치·특수교사 정원 확보 촉구

특수학급 과밀화 및 특수교사 근무 환경 열악 '지적'

김명수 광주 광산구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14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70차 시도대표회의에 참석해 '특수학급 설치 및 특수교사 정원 확보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김명수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특수학급 설치와 특수교사 배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수학급 과밀화가 심각해지고, 특수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특수학급에 배치받지 못한 학생들은 진학을 유예하거나 다음 배치 기회를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며, 그 과정에서 적시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교육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제공돼야 한다"며 "정부가 모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차별 없는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철저히 이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특수교사 정원 확충은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다"며 "교육부는 실질적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끝으로 "국회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제도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형평성 있는 포용적 교육정책을 즉각 실현해 달라"며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건의안은 이날 가결돼 국회 교육위원회, 대통령실, 교육부, 17개 시·도의회,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준행 기자

혐오 현수막, 철거 지침 마련… "'당사자나 다수가' 민원 넣으면"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혐오·비방 표현을 담은 현수막이 관리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피해 당사자나 여러 사람이 민원을 넣는 현수막은 철거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 현수막이어서 철거를 못 한다"며 혐오 현수막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2022년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는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거나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장소의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법이 개정됐지만, 이를 악용해 특정 국가나 인종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허위 사실을 담은 현수막들이 길거리에 즐비하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9월 29~30일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혐오·비방성 현수막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정선거나 대선 불복 관련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을 본 적 있는 시민 79.4%는 불편함을 느낀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가 옥외광고물법에 명시된 금지 광고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 사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의2는 ▲범죄행위 정당화 ▲음란·퇴폐적 내용 ▲청소년 보호·선도 방해 ▲인종차별적이거나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금지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되, 헌법에 따라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현은 제한하도록 했다.

광고물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고, 개인적 인권을 침해하며 민주주의를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경우 금지 광고물로 간주한다. 또 사회적 통합 저해 우려 등이 있어 피해 당사자 또는 다수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도 금지 광고물로 본다.

금지광고물 유형은 총 6개로 분류했다.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이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 또는 구성원에 대한 혐오 감정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비방성 허위 사실을 표현한 경우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금지 광고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뉴시스

김경수, 지선 출마 질문에 "지방시대위원회 성공이 중요"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성공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17일 밤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 의향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아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맡은 지) 반년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직위를 뗄 생각을 하시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경상남도지사 출마 가능성을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달 2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도 지방선거 출마 의향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어떤 역할이든 함께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만약 당에서 출마 요청이 오면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요청이 올지는 가봐야 아는 것"이라며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벌써 그 얘기를 하기에는…"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6월부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공약이었던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과 '행정수도 이전' 추진을 총괄하고 있다. /뉴시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